

행 정 학

해설위원 : 김덕관

무단복사 판매시 저작권법에 의거 경고조치 없이 고발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반드시 OMR카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OMR카드 작성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답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③	④	③	④	③	③	②	①	②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④	④	④	①	①	④	②	②	④

▶ 출제영역 분포

단원	문제수	단원	문제수
행정학총론	4	재무이론	3
정책이론	3	행정환류	1
조직이론	5	지방자치론	2
인사이론	2		

▶ 문제분류 및 실력진단기준

기출문제	17	생소한 문제	3	100점 방지	0
------	----	--------	---	---------	---



실질적인 만점: 100점 고득점: 90점 이상 분발대상: 80점 이하

▶ 총평

이번 시험은 90점 이상은 무난하게 맞을 수 있는 문제 구성이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전혀 없다가보다는 단원별 기출문제집(기출에 강한 행정학)의 기출문제라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다면 무난하게 90점 이상이 나오는 의미입니다. 나 형 기준 2, 17, 20번 정도가 기출문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2번은 조직이론의 상식으로, 17번은 정답일 수 없는 것을 소거하여 풀 수 있고, 20번은 제가 모든 강의에서 앞으로 출제될 수 있으니 대비하라고 했던 출제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100점도 가능한 시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엉뚱한 것을 공부한 수험생', '기출문제도 아직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으면서 불안한 마음에 기본서의 모든 것을 공부하려 했던 수험생'은 '무난한 90점', '100점도 가능'이 당연히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이번 시험이 대부분 기출문제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또 기출문제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는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시험"공부는 "시험문제"를 모르면 불가능합니다. "시험"공부니까요. 그리고 시험문제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현존하는 가장 좋은 자료는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시험공부는 "기출문제 파악부터" 제대로 해야 하는 겁니다. 기출문제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이번 시험보다 훨씬 적다고 하더라도 기출문제 파악"부터" 제대로 해야 시험공부가 가능한 겁니다.

"시험"공부에서 너무나 당연한 이것을 잘 실천해 온 분들은 이번 시험처럼 대부분 기출문제에서 나오는 경우 무난하게 90점 이상 맞는 것이고, 기출문제에서 덜 나오더라도 기출문제의 출제포인트/출제유형/출제패턴에 대해 파악한 것을 바탕으로 기출문제 외의 부분도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을 예측하여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엉뚱한 것을 공부하거나 기출문제도 아직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으면서 불안한 마음에 기본서의 모든 것을 공부하지 않게 됩니다.

이번 행정학은 합격가능한 분들 간 합격여부를 가르는 과목은 못 됩니다. 이 분들은 행정학은 거의 다 90점 이상이니깐요. 그런데 행정학 공부를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못 들어간 분들은 이 총평을 여러 번 곱씹어 보면서 앞으로는 "시험"에서 합격하는 공부방법으로 바꾸기 바랍니다.

▶ 문제 및 해설

[기출문제] 중요도 A, 난이도 하

문 1. 정부개입의 근거가 되는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부효과 발생
- ② 시장의 독점 상태
- ③ X-비효율성 발생
- ④ 시장이 담당하기 어려운 공공재의 존재

<암기용 해설>

③ X-비효율성 발생

▶ 정부실패의 원인

<이해용 해설>

- ① (○), ② (○), ④ (○) 외부효과의 발생, 시장의 독점 상태, 시장이 담당하기 어려운 공공재의 존재는 모두 시장실패의 원인이다.
- ③ (X) 정부의 독점적 공공서비스 공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비효율성을 의미하는 X-비효율성의 발생은 정부실패의 원인이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에강한행정학 178번(2012 경찰간부, 2009 국가7급)]

다음 보기 중 정부실패의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

ㄱ. 공공재의 존재	ㄴ. 사적목표의 설정
ㄷ. 외부효과의 발생	ㄹ. 파생적 외부효과
ㄱ. 불균평한 소득분배	ㅁ. 차연독점
ㅅ. 권력의 편제	ㅇ. X의 비효율

[생소한 문제] 중요도 C, 난이도 하**문 2. 조직목표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직구성원들이 목표로 인해 일체감을 느끼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동기를 유발해준다.
- ② 조직의 구조와 과정을 설계하는 준거를 제공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 ③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를 밝혀 조직활동의 방향을 제시한다.
- ④ 조직이 존재하는 정당성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암기용 해설>

④ 조직이 존재하는 정당성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 **조직목표:** 조직이 존재하는 정당성의 근거

<이해용 해설>

④ (X) 조직목표는 조직이 존재하는 정당성의 근거이다. 조직을 만드는 이 유 자체가 공동의 노력을 통해 어떤 목표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기출문제] 중요도 B, 난이도 중**문 3. 결정과 기획 같은 핵심기능만 수행하는 조직을 중심에 놓고 다수의 독립된 조직들을 협력 관계로 묶어 일을 수행하는 조직형태는?**

- ① 태스크 포스
- ② 프로젝트 팀
- ③ 네트워크 조직
- ④ 매트릭스 조직

<암기용 해설>

③ **네트워크 조직:** 중심조직은 핵심기능만 수행, 부수적 기능은 외부기관이 수행

<이해용 해설>

③ 중심조직은 결정·기획 등 핵심기능만 수행하고 부수적 기능은 외부기관에 아웃소싱(out-sourcing)하여 수행하는 조직유형을 네트워크 조직이라고 한다. 이는 중심조직과 다수의 독립된 외부기관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협력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관련 기출문제>**[기출에강한행정학 731번(2012 전환특채, 2009 서울9급)]**

조직의 기능을 핵심역량 중심으로 합리화하고 다른 기능은 외부기관과 계약 관계에 의해 수행하는 조직구조 모형은?

- ② 네트워크구조

[기출문제] 중요도 A, 난이도 중

문 4. 행정부에 대한 외부통제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행정안전부의 각 중앙행정기관 조직과 정원 통제
- ㄴ. 국회의 국정조사
- ㄷ. 기획재정부의 각 부처 예산안 검토 및 조정
- ㄹ. 국민들의 조세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 ㅁ. 국무총리의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기관평가
- ㅂ. 환경운동연합의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
- ㅅ. 중앙행정기관장의 당해 기관에 대한 자체평가
- ㅇ. 언론의 공무원 부패 보도

- ① ㄱ, ㄷ, ㅁ, ㅅ ② ㄴ, ㄷ, ㄹ, ㅁ
- ③ ㄴ, ㄹ, ㅁ, ㅇ ④ ㄴ, ㄹ, ㅂ, ㅇ

<Tip>

행정부에 대한 '내부통제 vs. 외부통제'를 구분하는 출제포인트에서는 행정부 내부의 참여자에 의한 통제인지 외부의 참여자에 의한 통제인지만 구분할 줄 알면 되고, 구체적인 제도는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암기용 해설>

- ㄱ. 행정안전부의 각 중앙행정기관 조직과 정원 통제
- ㄷ. 기획재정부의 각 부처 예산안 검토 및 조정
- ㅁ. 국무총리의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기관평가
- ㅅ. 중앙행정기관장의 당해 기관에 대한 자체평가
- ▶ 내부통제

<이해용 해설>

- ㄱ (X), ㄷ (X), ㅁ (X), ㅅ (X) 행정부 내부에 있는 참여자인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장에 의한 통제는 행정부에 대한 내부통제이다.
- ㄴ (O), ㄹ (O), ㅂ (O), ㅇ (O) 행정부 외부에 있는 참여자에 의한 통제인 국회, 국민, 환경운동연합, 언론에 의한 통제는 행정부에 대한 외부통제이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에강한행정학 1747번(2020 행정사, 2019 경찰간부, 2016 국가7급, ...)]
아래의 행정통제 유형 중 외부통제 방안을 전부 포함한 것은?

- | | |
|------------------|---------------|
| ㄱ. 입법부에 의한 통제 | ㄴ. 사법부에 의한 통제 |
| ㄷ. 감사원에 의한 통제 | ㄹ. 청와대에 의한 통제 |
| ㅁ. 중앙행정부처에 의한 통제 | ㅂ. 시민에 의한 통제 |
| ㅅ. 여론과 마스크 | ㅇ. 읍부즈만제도 |

[기출문제] 중요도 C, 난이도 상

문 5.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자치권)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조합도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Tip>

정답인 선지 ③ 자체는 어렵고 지엽적인 내용이지만, 선지 ③ 포함 모든 선지가 기출에 강한 행정학의 기출문제 중에 있기 때문에 정답을 바로 고르든 다른 선지를 소거하여 고르든 풀 수 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암기용 해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 ▶ 조례를 위반한 행위 ⇨ 조례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정 가능

<이해용 해설>

- ① (O)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 부과, 벌칙 등 주민에게 불이익한 조례를 정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을 받아야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③ (X) 「지방자치법」은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이 법률이 주민에게 불이익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규정이다.
- ④ (O)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조합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에강한행정학 1604번(2015 교행9급)]

- 우리나라 자치입법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법률의 위임 없이 제정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기출문제] 중요도 B, 난이도 상

문 6. 근무성적평정 과정상의 오류와 완화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관적 오류는 평정자의 기준이 다른 사람보다 높거나 낮은 데서 비롯되며 강제배분법을 완화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 ② 근접효과는 전체 기간의 실적을 같은 비중으로 평가하지 못할 때 발생하며 중요사건기록법을 완화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 ③ 관대화 경향은 비공식집단적 유대 때문에 발생하며 평정결과의 공개를 완화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 ④ 연쇄효과는 도표식 평정척도법에서 자주 발생하며 피평가자별이 아닌 평정요소별 평정을 완화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Tip>

평정결과가 공개되지 않으면 당연히 평정자가 피평정자와의 인간관계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겠죠? 평정결과가 공개되기 때문에 평정자가 피평정자와의 인간관계를 고려하여 점수를 후하게 주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 같지만 아무 것도 아니죠?

<암기용 해설>

- ③ 관대화 경향은 비공식집단적 유대 때문에 발생하며 **평정결과와 공개**를 완화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 ▶ **관대화 경향: 평정결과가 공개되기 때문에 발생**

<이해용 해설>

- ① (○) **일관적(규칙적) 오류**는 평정자의 기준이 다른 사람보다 항상 높거나 항상 낮기 때문에 **분포상 오류가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강제배분법**은 성적의 분포 비율이 애초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분포상 오류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 ② (○) **근접효과**는 전체 기간의 실적을 같은 비중으로 골고루 고려하지 않고 **평정 시점에 가까운 최근 사건**을 주로 고려하는 오류이다. **중요사건 기록법**은 전체 기간의 중요사건을 기록하는 평정방법이기 때문에 **근접효과를 방지**할 수 있다.
- ③ (×) 실제보다 점수를 후하게 주는 **관대화 경향**은 평정자가 피평정자와의 인간관계 등 **비공식집단적 유대**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 발생한다. **평정 결과가 피평정자에게 공개되기** 때문에 평정자는 피평정자와의 인간관계를 고려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평정결과의 공개는 관대화 경향의 완화방법이 아니다.
- ④ (○) **연쇄효과**는 하나의 평정요소가 다른 평정요소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는 오류이다. 이는 피평정자별로 여러 평정요소를 함께 평정하는 방법보다는 같은 피평정자라도 **평정요소별로 각각 평정하여** 방지할 수 있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에강한행정학 1082번(2019 국가9급, 2019, 2016 서울9급)]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근무성적평정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저는 학생들을 평가함에 있어 성적 분포의 비율을 미리 정해 놓고 등급을 줍니다. 비록 평가 대상 전원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일정 비율의 인원이 좋은 평가를 받거나, 혹은 전원이 우수하더라도 일부의 학생은 낮은 평가를 받게 되지만, 이 방법을 통해 학생들의 성적 분포가 과도하게 한 쪽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아 평정 오차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합니다.

① 강제배분법

[기출에강한행정학 1090번(2015 경정승진)]

승진에서 근무성적평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다음 근무성적평정 오류 사례에 관한 방지대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임용된 이후 매일 일찍 출근하며 성실히 근무하던 어떤 직원이 근무성적평정 하루 전날 지각을 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이 직원은 평정요소 중 직무수행태도에 대하여 낮은 점수를 받게 되었다.

④ 중요사건기록법 사용

[기출에강한행정학 1086번(2011 경찰간부)]

근무성적평정에 나타나는 오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집중화** 경향은 상관이 부하와의 인간관계를 고려하여 실제보다 후한 평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
- ④ **연쇄효과**란 평정자가 가장 중요시하는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한 평가결과가 성격이 다른 평정요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쇄화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강제선택법을 사용한다.

[기출문제] 중요도 B, 난이도 중

문 7. 테일러(Taylor)의 과학적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리자는 생산증진을 통해서 노·사 모두를 이롭게 해야 한다.
- ② 조직 내의 인간은 사회적 욕구에 의해 동기가 유발된다고 전제한다.
- ③ 업무와 인력의 적정한 결합은 노동자가 아닌 관리자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 ④ 업무수행에 관한 유일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동작연구와 시간연구를 사용한다.

<암기용 해설>

- ② 조직 내의 인간은 사회적 욕구에 의해 동기가 유발된다고 전제한다.
- ▶ 과학적 관리론: 합리적 인간관 ⇨ 금전적 보상에 의해 동기유발
인간관계론: 사회적 인간관 ⇨ 사회적 욕구에 의해 동기유발

<이해용 해설>

- ① (○) 과학적 관리론에서 관리자는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생산성에 비례하여 금전적 보상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를 이롭게 해야 한다고 본다.
- ② (×) 합리적 인간관을 가정하는 과학적 관리론은 조직 내의 인간은 금전적 보상에 의해 동기가 유발된다고 본다. 사회적 욕구에 의해 동기가 유발된다고 보는 이론은 인간관계론이다.
- ③ (○), ④ (○) 과학적 관리론은 시간과 동작에 관한 연구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유일 최선의 방법을 찾고, 관리자가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업무와 인력을 결합시켜야 한다고 본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에강한행정학 38번(2009 서울9급)]

다음은 과학적 관리론에 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조직 내의 인간을 경제적 유인에 의해 동기가 유발되는 타산적 존재로 가정한다.
- ③ 과학적 분석에 의하여 유일최선의 방법(one best way)을 발견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기출문제] 중요도 A, 난이도 하

문 8. 신공공관리와 뉴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뉴거버넌스가 상정하는 정부의 역할은 방향잡기(steering)이다.
- ② 신공공관리의 인식론적 기초는 공동체주의이다.
- ③ 신공공관리가 중시하는 관리 가치는 신뢰(trust)이다.
- ④ 뉴거버넌스의 관리 기구는 시장(market)이다.

<암기용 해설>

- ② 신공공관리의 인식론적 기초는 공동체주의이다.
- ▶ 신공공관리론의 인식론적 기초: 신자유주의
뉴거버넌스론의 인식론적 기초: 공동체주의
- ③ 신공공관리가 중시하는 관리 가치는 신뢰(trust)이다.
- ▶ 신공공관리론의 관리 가치: 경쟁
뉴거버넌스론의 관리 가치: 신뢰와 협력
- ④ 뉴거버넌스의 관리 기구는 시장(market)이다.
- ▶ 신공공관리론의 관리 기구: 시장
뉴거버넌스론의 관리 기구: 네트워크

<이해용 해설>

- ① (○)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 모두 정부의 역할을 방향잡기(steering)로 본다. 이는 정부의 역할을 정책결정 기능과 집행 기능 중 정책결정 기능으로 국한하는 것이다.
- ② (×) 신공공관리론의 인식론적 기초는 신자유주의이고, 뉴거버넌스론의 인식론적 기초는 공동체주의이다.
- ③ (×) 신공공관리론의 관리 가치는 경쟁을 통한 효율성이고, 뉴거버넌스론의 관리 가치는 신뢰와 협력을 통한 효율성이다.
- ④ (×) 신공공관리론의 관리 기구는 시장이며, 뉴거버넌스론의 관리 기구는 네트워크이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에강한행정학 145번(2019 교행9급)]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② 신공공관리론이 신자유주의에 인식론적 기초를 두는 반면 뉴거버넌스론은 공동체주의에 근거를 둔다.
- ④ 신공공관리론은 정부 역할을 노젓기(rowing)로 보는 반면 뉴거버넌스론은 정부 역할을 방향잡기(steering)로 본다.

[기출문제] 중요도 A, 난이도 중

문 9. 로위(Lowi)의 정책유형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규제정책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의 정책으로 강제력이 특징이다.
- ㄴ. 분배정책의 사례에는 FTA협정에 따른 농민피해 지원,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지원, 사회보장 및 의료보장정책 등이 있다.
- ㄷ. 재분배정책은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급대립적 성격을 지닌다.
- ㄹ. 재분배정책의 사례로는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 영세민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대덕연구개발 특구 지원 등이 있다.
- ㅁ. 구성정책은 정부기관의 신설과 선거구 조정 등과 같이 정부기구의 구성 및 조정과 관련된 정책이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ㅁ
- ③ ㄴ, ㄹ, ㅁ
- ④ ㄷ, ㄹ, ㅁ

<Tip>

선지 ㄴ의 'FTA협정에 따른 농민피해 지원' 정책은 농민이 원래부터 사회적 약자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지원이라 하더라도 특정집단에 편익을 배분하는 분배정책에 해당합니다.

<암기용 해설>

ㄴ. 분배정책의 사례에는 FTA협정에 따른 농민피해 지원,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지원, **사회보장 및 의료보장정책** 등이 있다.

▶ **사회보장 및 의료보장정책: 재분배정책**

ㄷ. 재분배정책의 사례로는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 영세민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대덕 연구개발 특구 지원** 등이 있다.

▶ **대덕 연구개발 특구 지원: 분배정책**

<이해용 해설>

ㄱ ○ 규제정책은 공익을 위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책으로, 개별적인 행위자에게 강제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정책이다.

ㄴ (X) 사회보장 및 의료보장정책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해주기 위한 재분배정책에 해당한다.

ㄷ ○ 재분배정책은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을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부자 계급과 빈자 계급 간 계급대립적 성격이 강하다.

ㄹ (X) 대덕 연구개발 특구 지원은 특정집단에 편익을 배분해주는 분배정책에 해당한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에강한행정학 358번 관련틀린선지(2013 지방9급)]

정책유형과 그 사례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재분배정책(redistribution policy) - 누진세를 통한 사회보장 지출 확대, **항공노선 취항권의 부여**

[기출에강한행정학 350번(2008, 2006 국회8급)]

다음의 정책 중 성격이 다른 것은?

- ② 임대주택의 건설: 재분배정책
- ④ 연구개발비 지원: 분배정책

[기출문제] 중요도 B, 난이도 중

문 10. 우리나라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시킬 수 없다.
- ② 정부가 예산안 편성 시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 모든 예산을 편성해 운영할 수 있다.
- ④ 국회는 감사원이 검사를 완료한 국가결산보고서를 정기회 개최 전까지 심의·의결을 완료해야 한다.

<암기용 해설>

③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 **모든** 예산을 편성해 운영할 수 있다.

▶ **준예산 지출가능항목이 정해져 있음**

<이해용 해설>

① (○)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 행정부는 예산안 편성 시 감사원,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기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X)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하여 예산이 불성립한 경우 행정부는 **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준예산 편성은 모든 예산에서 가능한 게 아니라 헌법이 정한 **지출가능항목에서만** 가능하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에강한행정학 1270번(2017 행정사)]

예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준예산은 지출항목이 한정적이다.
- ③ 한국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이 되지 않을 경우 준예산을 사용한다.

[기출문제] 중요도 B, 난이도 하

문 11.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부패행위 신고의무
- ② 품위 유지의 의무
- ③ 복종의 의무
- ④ 성실 의무

<암기용 해설>

① 부패행위 신고의무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

<이해용 해설>

① (X) 부패행위 신고의무는 「국가공무원법」이 아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에강한행정학 1192번(2013 경찰승진)]

공직윤리와 관련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 및 공개의무, 공직 내부비리 발견 시 신고할 의무, 선물수수 신고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기출에강한행정학 1192번 관련틀린선지(2019 경찰간부)]

공직 윤리 및 행동규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부패행위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기출문제] 중요도 B, 난이도 상

문 12. 예산주기에 비추어 볼 때 2021년도에 볼 수 없는 예산 과정은?

- ① 국방부의 2022년도 예산에 대한 예산요구서 작성
- ② 기획재정부의 2021년도 예산에 대한 예산배정
- ③ 대통령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
- ④ 감사원의 2021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보고서 작성

<Tip>

못 보던 형태라 하더라도 이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그냥 우리나라 예산과정 중 예산편성, 예산심의, 예산집행, 결산 단계를 구분하는 문제일 뿐입니다. 제가 모든 강의에서 우리나라 예산과정을 공부할 때는 어떤 단계인지를 혼동하지 말라고 계속 강조해왔잖아요!

<암기용 해설>

④ 감사원의 2021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보고서 작성

▶ 2021년도에는 2020년에 집행된 예산에 대해 결산

<이해용 해설>

① (O), ③ (O) 2021년도에는 2022년의 예산에 대한 행정부의 예산편성 및 입법부의 예산심의 과정이 진행된다. 예산요구서 작성은 행정부의 예산편성 단계이고, 시정연설은 예산심의 단계이다.

② (O) 2021년도에는 2021년 예산의 예산집행 과정이 진행된다. 예산배정은 예산집행 단계이다.

④ (X) 2021년도에는 2020년에 집행된 예산에 대해 결산 과정이 진행된다. 감사원의 결산검사보고서 작성은 결산 단계이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에강한행정학 1446번(2012 국회8급)]

예산의 결산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④ 감사원은 결산 확인이 끝나면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한다. 그리고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결산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말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기출문제] 중요도 B, 난이도 중

문 13. 「국가재정법」상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 ② 남북관계의 변화와 같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 ③ 경기침체, 대량실업 같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④ 경제협력, 해외원조를 위한 지출을 예비비로 충당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암기용 해설>

④ 경제협력, 해외원조를 위한 지출을 예비비로 충당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국가재정법」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유가 아님

<이해용 해설>

① (○), ② (○), ③ (○), ④ (×) 「국가재정법」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유로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 같은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법령에 따른 지출의 발생을 규정하고 있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에강한행정학 1267번(2015 서울9급)]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재정의 방만한 운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국가재정법 제89조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다. 다음 중 위 법 조항에 명시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②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 ③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④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기출문제] 중요도 B, 난이도 중

문 14. 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공수요가 있으나 민간부문의 자본이 부족한 경우 공기업 설립이 정당화된다.
- ② 시장에서 독점성이 나타나는 경우 공기업 설립이 정당화된다.
- ③ 전통적인 자본주의적 사기업 질서에 반하여 사회주의적 간섭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주식회사형 공기업은 특별법 혹은 상법에 의해 설립되지만 일반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조직·인사 원칙이 적용된다.

<암기용 해설>

④ 주식회사형 공기업은 특별법 혹은 상법에 의해 설립되지만 일반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조직·인사 원칙이 적용된다.

▶ 일반행정기관에 적용되는 규정이 적용되는 공기업: 정부부처형(정부기업형) 공기업

<이해용 해설>

- ① (○) 어떤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공공수요가 있으나 민간부문에서는 자본의 부족 등으로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공기업을 만들어 공급한다.
- ② (○) 시장에서 공급하면 독점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공공서비스는 정부가 공기업을 만들어 공급한다.
- ③ (○)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기업은 전통적인 자본주의적 사기업 질서에 반하여 정부가 시장에 사회주의적 간섭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 일반행정기관에 적용되는 규정이 적용되는 공기업 유형은 정부부처형(정부기업형) 공기업이다. 공사형 공기업과 주식회사형 공기업은 일반행정기관이 아닌 법인 형태의 공기업으로, 일반행정기관에 적용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에강한행정학 799번(2008 경남9급)]

다음 중 공기업의 설치, 운영의 근거와 거리가 먼 것은?

- ① 시장실패의 시정
- ③ 사회주의적 경제원리 도입

[기출에강한행정학 801번(2006 국회8급)]

다음의 우리나라 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 ② 정부부처형 공기업은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을 받는다.
- ③ 정부부처형 공기업은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기출문제] 중요도 A, 난이도 하

문 15. 동기요인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아담스(Adams)의 공정성 이론에 따르면 공정하다고 인식할 때 동기가 유발된다.
- ② 매클리랜드(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에 따르면 개인들의 욕구가 학습을 통해 개발될 수 있다.
- ③ 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서 기대감은 특정 결과는 특정한 노력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신념으로 통상 주관적 확률로 표시된다.
- ④ 엘더퍼(Alderfer)의 ERG이론에 따르면 상위욕구 충족이 좌절되면 하위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할 수 있다.

<암기용 해설>

- ① 아담스(Adams)의 공정성 이론에 따르면 **공정**하다고 인식할 때 동기가 유발된다.
- ▶ 아담스의 공정성(형평성) 이론: 불공정하다고 인식할 때 동기유발

<이해용 해설>

- ① (X) 아담스(Adams)의 공정성(형평성) 이론은 투입 대비 산출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불공정하다고 인식할 때 동기가 유발된다고 본다.
- ② (O) 매클리랜드(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은 매슬로우(Maslow)의 욕구계층이론과 달리 개인들의 욕구는 본능이 아니라 학습을 통해 습득되고 개발될 수 있다고 본다.
- ③ (O) 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서 기대감은 **노력이 결과(성과)**로 이어지는 정도에 대한 믿음을 말한다.
- ④ (O) 엘더퍼(Alderfer)의 ERG이론은 매슬로우(Maslow)의 욕구계층이론과 달리 인간이 상위욕구를 먼저 추구하고 **상위욕구의 충족이 좌절되면 하위욕구로 퇴행하는 것을 더 강조한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에강한행정학 849번(2014 국가9급)]

조직구성원들의 동기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ERG이론: 엘더퍼(C. Alderfer)는 욕구를 존재욕구, 관계욕구, 성장욕구로 구분한 후 상위욕구와 하위욕구 간에 '좌절-퇴행' 관계를 주장하였다.
- ㄷ. 형평이론: 아담스(J. Adams)는 자기의 노력과 그 결과로 얻어지는 보상을 준거인물과 비교하여 **공정**하다고 인식할 때 동기가 유발된다고 주장하였다.
- ㄹ. 기대이론: 브룸(V. Vroom)은 보상에 대한 매력성, 결과에 따른 보상, 그리고 결과발생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 동기유발의 강도가 좌우된다고 보았다.

[기출문제] 중요도 A, 난이도 중

문 16. 정책평가와 관련하여 실험결과의 외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연구자의 측정기준이나 측정도구가 변화되는 경우
- ② 표본으로 선택된 집단의 대표성이 약할 경우
- ③ 실험집단 구성원 자신이 실험대상임을 인지하고 평소와 다른 특별한 반응을 보일 경우
- ④ 실험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만을 의도적으로 실험집단에 배정하는 경우

<암기용 해설>

- ① ~~연구자의 측정기준이나 측정도구가 변화되는 경우~~
- ▶ 측정도구요인: 내적 타당성 저해요인

<이해용 해설>

- ① (X) 연구자의 측정기준이나 측정도구가 변화하여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측정도구요인은 내적 타당성 저해요인이다.
- ② (O) 표본으로 선택된 집단의 대표성이 약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는 다른 집단에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표본의 대표성 부족은 외적 타당성 저해요인이다.
- ③ (O) 실험집단 구성원 자신이 실험대상임을 인지하고 평소와 다른 특별한 반응을 보인 결과는 다른 집단에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호손효과(조작에 대한 반응효과)는 외적 타당성 저해요인이다.
- ④ (O) 실험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만을 의도적으로 실험집단에 배정한 결과는 다른 집단에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크리밍 효과는 외적 타당성 저해요인이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에강한행정학 607번(2020 경찰간부, 2010 국회8급)]

<보기> 중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

- ㄷ. 실험조작의 반응효과 ㄱ. 측정도구요인
- ㅇ. 표본추출의 대표성 문제

[기출에강한행정학 610번(2006 국가7급)]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 저해요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③ 도구요인(instrumentation) :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측정수단을 달리하거나, 정책 실시 전과 실시 후의 정책효과 측정수단이 다른 경우에 발생한다.

[기출에강한행정학 614번(2020 국회8급, 2017 국가(추)9급)]

정책평가에 있어서 조건이 양호한 집단을 대상으로 정책수단을 실시한 후 그 결과가 좋게 나타난 정책수단을 다른 상황에 적용하려고 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외적 타당성의 문제는?

- ① 크리밍효과(creaming effect)

[생소한 문제] 중요도 C, 난이도 중

문 17. 우리나라의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장 유력한 직접민주주의 제도이다.
- ②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소환 대상이 아니다.
- ③ 심리적 통제 효과가 크다.
- ④ 군수를 소환하려고 할 경우에는 해당 군의 주민소환 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해야 한다.

<Tip>

정답인 선지 ④의 주민소환 청구요건은 그동안 출제된 적이 없는 지역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정답으로 고르진 못하더라도, 선지 ②는 주민소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내용이고 선지 ①, ③은 틀렸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들을 소거하여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암기용 해설>

- ④ 군수를 소환하려고 할 경우에는 해당 군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해야 한다.
- ▶ 시·군·구의 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요건: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의 서명

<이해용 해설>

- ① (○), ③ (○) 주민소환은 주민들이 선거를 통해 직접 선출한 관료의 임기 지속 여부에 대해 투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강력한 직접민주주의 제도이다. 주민이 대상 관료를 직접 면직시킬 수도 있고, 대상 관료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효과도 있다.
- ② (○) 주민소환의 대상은 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이다. 다만,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은 제외한다.
- ④ (X) 시·군·구의 단체장에 대해 주민소환을 청구하려면 주민소환 투표권자 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기출문제] 중요도 A, 난이도 하

문 18. 신공공서비스론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부의 역할은 시민에 대한 봉사여야 한다.
- ② 공익은 개인적 이익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시민들과 신뢰와 협력의 관계를 확립해야 한다.
- ③ 책임성이란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관료들은 헌법, 법률, 정치적 규범, 공동체의 가치 등 다양한 측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④ 생산성보다는 사람에게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공공조직은 공유된 리더십과 협력의 과정을 통해 작동되어야 한다.

<암기용 해설>

- ② 공익은 ~~개인적 이익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시민들과 신뢰와 협력의 관계를 확립해야 한다.
- ▶ 개인적 이익의 집합체(총합): 신공공관리론의 공익

<이해용 해설>

- ① (○) 정부의 역할을 방향잡기(steering)로 국한하는 신공공관리론과 달리 신공공서비스론은 정부의 역할을 시민에 대한 봉사로 본다.
- ② (X) 개인적 이익의 집합체(총합)는 신공공관리론의 공익 개념이다. 신공공서비스론은 시민들 간 담론을 통해 도출한 공유가치를 공익으로 본다.
- ③ (○) 성과를 통한 책임성만 강조하는 신공공관리론과 달리 신공공서비스론은 헌법, 법률, 정치적 규범, 공동체의 가치 등 다양한 측면의 책임성을 강조한다.
- ④ (○) 생산성만 강조하는 신공공관리론과 달리 신공공서비스론은 행정의 주인으로서 시민 자체의 가치를 강조한다. 따라서 조직 형태도 분권화된 자율적 조직을 강조하는 신공공관리론과 달리 공공조직의 운영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리더십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것을 강조한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에강한행정학 161번 관련틀린선지(2020 경찰간부)]

신공공서비스론(NPS)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 공익은 공유하고 있는 가치에 대해 대화와 담론을 통해 얻은 결과물이 아닌 개인 이익의 단순한 합산으로 보고 있다.

[기출문제] 중요도 B, 난이도 상

문 19. 공공사업의 경제성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할인율이 높을 때는 편익이 장기간에 실현되는 장기투자사업보다 단기간에 실현되는 단기투자사업이 유리하다.
- ㄴ. 직접적이고 유형적인 비용과 편익은 반영하고, 간접적이고 무형적인 비용과 편익은 포함하지 않는다.
- ㄷ. 순현재가치(NPV)는 비용의 총현재가치에서 편익의 총현재가치를 뺀 것이며 0보다 클 경우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 ㄹ. 내부수익률은 할인율을 알지 못해도 사업평가가능하도록 하는 분석기법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 ③ ㄴ, ㄷ ④ ㄱ, ㄷ, ㄹ

<Tip>

선지 ㄴ에서 비용편익분석은 간접적이고 무형적인 비용과 편익을 포함하지 않는 게 아니라! 간접적이고 무형적인 비용과 편익도 화폐가치화하여 비교하는데! 간접적이고 무형적인 비용과 편익은 화폐가치화가 어렵다는 비판을 받는 겁니다. 제가 모든 강의에서 이 점을 혼동하지 말라고 강조해줬었죠?

<암기용 해설>

- ㄴ. 직접적이고 유형적인 비용과 편익은 반영하고, 간접적이고 무형적인 비용과 편익은 **포함하지 않는다.**
- ▶ **비용편익분석: 모든 비용과 편익을 화폐가치화 하여 비교**
- ㄷ. 순현재가치(NPV)는 **비용**의 총현재가치에서 **편익**의 총현재가치를 뺀 것이며 0보다 클 경우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 ▶ **순현재가치(NPV) = 편익의 현재가치(B) - 비용의 현재가치(C)**

<이해용 해설>

- ㄱ ○ 편익이 장기간에 실현되는 장기투자사업의 경우 **할인율이 높을수록 순현재가치가 작아져서 대안의 경제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할인율이 높을수록 장기투자사업보다는 단기투자사업이 유리하다.
- ㄴ (X) 비용편익분석은 **모든 비용과 편익을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비교하는 방법이다. 직접적이고 유형적인 비용과 편익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고 무형적인 비용과 편익도 모두 포함한다.
- ㄷ (X) 순현재가치(NPV)는 **편익의 현재가치(B)에서 비용의 현재가치(C)를 뺀 값**을 말한다.
- ㄹ ○ 내부수익률(IRR)은 정책의 비용과 편익을 평가하는데 **적절한 할인율을 모르더라도 구할 수 있고** 시장이자율과 비교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평가방법이다.

<관련 기출문제>

- [기출에강한행정학 472번 관련틀린선지(2007 인천9급)]
다음 중 비용편익분석에서 순현재가치기법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 높은 시간적 할인율은 장기투자에 **유리**하다.
- [기출에강한행정학 471번(2010 세무사)]
공공사업의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④ 공공사업에서 발생하는 무형의 비용 및 편익에 대한 평가가 매우 힘든 경우 비용효과분석을 사용한다.
- [기출에강한행정학 472번(2017 서울7급, 2008 국가7급)]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④ 적절한 할인율이 주어지지 않을 때는 내부수익률 기준을 사용하며, 내부수익률이 시장이자율을 상회하면 일단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생소한 문제] 중요도 B, 난이도 중

문 20. 공공봉사동기이론(public service motiv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사부문 간 업무성격이 다르듯이, 공공부문의 조직원들은 동기구조 자체도 다르다는 입장에 있다.
- ② 정책에 대한 호감, 공공에 대한 봉사, 동정심(compassion) 등의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③ 공공봉사동기가 높은 사람을 공직에 **충원**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④ 페리와 와이스(Perry&Wise)는 제도적 차원, 금전적 차원, 감성적 차원을 제시하였다.

<Tip>

처음 출제된 출제포인트이지만, 이미 모든 강의에서 예상 출제포인트로 배웠던 내용이니 아주 쉽게 풀었죠?

<암기용 해설>

- ④ 페리와 와이스(Perry&Wise)는 **제도적 차원, 금전적 차원**, 감성적 차원을 제시하였다.
- ▶ 합리적 동기, 규범적 동기, 정서적(감성적) 동기

<이해용 해설>

- ① ○, ② ○ 페리(Perry)와 와이스(Wise)의 공공봉사동기이론은 공공부문의 조직원은 민간부문의 조직원보다 **지역공동체·국가·인류를 위해 봉사하려는 동기가 강하다**는 이론이다. 이는 금전적·물질적 보상이 아닌 이타심에 기반을 둔 정책에 대한 호감, 공공에 대한 봉사, 동정심 등에 의한 동기를 말한다.
- ③ ○ 지역공동체·국가·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역할을 하는 공직에는 공공봉사동기가 높은 사람을 충원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④ (X) 페리와 와이스는 공공봉사동기의 종류를 **합리적 동기, 규범적 동기, 정서적(감성적) 동기**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합리적 동기**란 이타심을 가지고 공익을 실현하는 것을 자신의 목표로 삼는 관료에게는 지역공동체·국가·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는 관점이며, **규범적 동기**란 관료에게는 지역공동체·국가·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보는 관점이며, **정서적(감성적) 동기**는 관료에게는 사회적 약자 등을 돕고 싶어 하는 감정이 있어 지역공동체·국가·인류를 위해 봉사한다고 보는 관점이다.